

공정과 노동시장

‘공정’하다는 것의 의미, ‘훼손’되었다는 그 ‘공정’이 의미하는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다수의 취업준비생들과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말하는 공정이 훼손되면서 손해를 보았다고 말하는 ‘내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조건’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 다니기 위해 그동안 투여해왔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현재 또는 미래’가 아니라 ‘피. 땀, 눈물’이 서려있는(또는 그렇게 믿고 있는)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는 개선가능성의 영역이지만 과거는 타임머신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물리법칙이 등장하지 않는 한 보상도 개선도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것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지금 이야기되는 공정담론은 사실은 “성공만으로는 부족하다. 남들이 패배해야 한다 - 고어 비달”과 같다. 이것은 사실상 자신들이 제쳐왔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우월성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남들 위에 군림하려는 욕구이다. 그러니 마치 고생했다고 믿는(?) 과거가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러다보면 자신들이 손해 보는 것을 넘어 남들이 패배의 위치에 있어야 자신들의 지위가 우월하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고생해서 쟁취한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쟁취했다는 것은 착각은 아닌가? 재능은 공정한가? 평등한가? 노력할 수 있는 조건은 누구에게나 평등한가? 결국은 경제적 환경이 더 큰요인으로 작동한다는 비정한 현실을 마주치게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많은 사람들은 이 불평등의 현실을 말하지 않은채 절차적 공정만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능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얼마나 나이브 한가?

<공정하다는 착각 - 마이클 센델>

- ‘옆문(편법)’,또는 ‘뒷문(불법)’으로 명문대에 들어간 대학입시 비리에 분노하는 미국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바라보며 마이클 센델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 ‘옆문과 뒷문으로 들어간 것에 분노하는 것은 알겠는데 정문은 공정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

만약 우리 사회가 미래가 불안정하지 않고 자산 및 사회적 지위 등에서 사회적 박탈감이 덜한 사회라면 ‘과거의 고생에 대한 보상’ 담론이 조금은 덜 했을까? 아니면 기존 우리 사회의 주요 가치와 정책방향에 대한 충분한 비판적 평가와 반성이 전제된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사회정책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했어야 하는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비정규직은 문제이니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만 했지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이중노동시장 문제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와 충돌되는 것이고 과거의 무한경쟁을 강

요한 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일단은 노동시장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질문을 옮겨보자. 비정규직으로 해당 업무에서 최소 3년에서 길게는 7년을 성실하고 문제없이 업무수행을 해온 비정규직에게 동일업무에 경험이 전혀 없는 공채출신 신입사원 정규직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보상받지 못하는 과거에 대한 박탈감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다소 비정한 기업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동일 업무에 검증된 업무능력이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높은 임금의 정규직 공채를 선발하여 다시 몇 년의 숙련을 쌓게 하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채용하는 인력, 나아가 일자리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 또는 주요 민간대기업 역시 기업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숙련도를 고려하기 보다는 때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공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인력을 선발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공공부문(또는 민간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고용안정, 임금수준 등의 처우의 차이가 아니라 '신분'의 차이로 만들어 버린다.

이는 마치 대학서열화체제와 유사한데 수능점수 등을 몇 점을 맞았는지에 따라 SKY - 인서울 - 지방 국립/사립대 - 2/3년제 대학 등으로 이어지는 서열화 체제처럼 한국사회 일자리가 5급 공무원 - 상위권 공기업 - 민간대기업 - 중소기업 등으로 서열화 되어 작동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서열화 구조 안에서 고용안정, 임금, 노동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이 정해지고 나아가 외부에 과시할 수 있는 '타이틀이자 뱃지'로도 작동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일자리는 단순히 임금, 고용안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가 되어있다. 어쩌서 이렇게 되었을까? 이는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이 존중되기 보다는 어떤 '기업'에 다니는가가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 문제이기도 하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는 임금체계, 기업간 격차, 노동에 대한 혐오 등이 담겨져 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진보 역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보진영이 이야기하는 '좋은 일자리' 담론이나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 담론들이 혹여 이러한 일자리의 신분화를 고착화시키고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담론과 함께 작동하지는 않는가?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진행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점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 정책이라는게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다. 기존 정규직, 공공부문, 면허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가 좋아지면 다른 일자리들의 질을 끌어당기는 모델 세터 역할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마치 노동시장 판 '낙수효과' 같은 건데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올라가면 그만큼 전체 일자리가 좋아진다는 논리였는데 작동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낙수효과는 없다. 그들만의

일자리, 그들만의 안정적인 삶, 워라밸이 되어버린다. 그 밖에 있는 90%의 일자리의 과도한 경쟁, 노동시간, 무너진 삶의 질, 불안정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나머지 하나의 접근은 90%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식인데 이것 역시 기존 진보담론에서 '정규직화', 또는 '공공부문화'가 정답인양 이야기 되었다. 이것은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구도를 설정하면 정규직은 선, 공공부문 일자리는 선과 같은 구도가 되는 것인데 패착이었다.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권리, 정의, 평등의 문제로 접근했어야 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각종 정규직화 논란 등의 맥락에는 당사자들의 반발도 있지만 더 크게는 이런 구조가 깔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임금, 고용안정성 등등에 있어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조적인 '이중노동시장' 문제를 방치하고서 주장되고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이미 공공부문과 민간대기업 일부를 포함한 20%의 일자리는 거대한 성벽 안에 존재하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다. 혹여 일각의 주장처럼 임금수준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성벽 안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안정성과 향후의 기대이익이 높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문제는 성벽의 밖에 완전히 다른 논리와 비합리적 처우로 존재하는 80%의 거대한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와 서열화 된 일자리 체제에서는 성벽 안으로 아무리 사람들을 밀어 넣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또 다른 격차의 공고화로 작동한다. 결국은 “성벽을 더 높게 쌓을 것인가? 아니면 광장의 문을 열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 한국의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성벽 안의 일자리라 할 수 있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공형 임금체계', '기업복지' 등은 과연 공정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임금체계인지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일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급여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공정'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 역시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만을 두고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의미있다고 여겨지는 존중감을 받고 스스로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노동'이 희소한 것이다. 원인으로서는 우리 사회의 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노동'으로 재조명되는 돌봄노동을 비롯한 기존의 저숙련, 저임금노동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자리'와 '노동'을 둘러싼 새로운 가치정립이 필요하다.

*이 글은 기존 기고글 시사IN 669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02> 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